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

권 영 속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노동의 결과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권리이다. 그러한 권리는 어떠한 계급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단지 한 사람의 노동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암묵적으로 불평등한 개인적 재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자의 불평등한 생산 능력을 자연적 특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불평등의 권리이다. 권리는 본질상 동등한 척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불평등한 개인들(만약 그들이 불평등하지 않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아닐 것이다)이 동등한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그들을 동등한 척도에서 파악하는 한에서, 즉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한에서이다. 가령 여기서는 그들이 단지 노동자로서만 간주되고 그 이상의 것, 다른 모든 것은 일체 무시되고 도외시 되는 것이다. 더욱이 어떤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한 노동자는 결혼을 했지만 다른 노동자는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으며, 어떤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고 따라서 사회적 소비 자금을 동일하게 분배받는다 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실제로 더 많이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모든 결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는 동등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평등해야 할 것이다." (칼 마르크스, <고타 강령 비판>)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짓밟는 일을 스스로 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그것은 남의 물건을 취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며, 거기에서 이득을 보고, 남을 지배하고 그리하여 타인의 예속을 획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자유의 첫번째 기준은 남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을 때 자유롭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형성하겠는가? 이것이 (볼랭빌리에의) 자유에 대한 첫번째 설명이다. 볼랭빌리에에게 있어서 자유는 정확히 평등의 반대다. 그것은 차이와 지배, 전쟁, 여하튼 모든 권력 관계의 체계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다. 불평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표출되지 않는 자유는 추상적이고 무기력하고 허약한 자유일 뿐이다. 비록 언제 어디선가 그것(* 원초적 자유의 상태)이 존재한 적이 있더라도, 이 자연적 자유와 이 평등적인 자유, 이 자연법은 다음과 같은 역사 법칙, 즉 자유라는 것이 타인을 희생시켜 확보되는 어떤 사람의 자유를 의미할 때, 그리고 사회가 본질적인 불평등을 보장해 줄 때에만 자유가 힘이 있고 원기가 있으며 완전하다는 역사법칙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 (푸코, <사회는 방어되어야 한다>, pp. 186-187)

I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

이론적으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전제(presuppose)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는 필수적으로 민주주의를 '요구'(require)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는 우발적(contingent)이며, 역사적이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관계 하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되돌아온다. 즉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필연적인 상부구조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우연적 사회관계다.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역사 속에서도 그랬다. 반대로 자본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자본주의 이후의 단계, 즉 사회주의 단계가 아닌 다음에야 자본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으며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원시 공산주의 제외).

2.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이런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할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계급 구조에서 발생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노동을 자본과 동등한 관계에서 교환되는 것으로 사고한다고 지적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들은 노동의 담지자인 노동자가 신분제 봉건사회와 달리, 사회의 지배자인 부르주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교환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자본가들의 '도덕'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식'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들이 지불하는 임금과 교환한다. 이때 이 교환은 시장 논리, 즉 수요와 공급에 따른 '평등한,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교환 과정에 진입하는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와 동등한 인간으로 제시된다. 실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불평등 교환관계(임금)이지만,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따른 '동등한 교환관계'라는 환상을 생산해낸다. 즉 이같은 환상(이데올로기)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교환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왜냐하면, 그같은 '등가교환'이 없다면, 아예 노동/임금 교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따라서 이 교환 관계에 있어서의 동등성에서 '보편적 인간'이라는 관념이 제기된다. 이 보편적 인간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자유,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가진 '어떤 존재'로 상정된다.

이 존재의 정치적 투영이 자본주의하에서의 민주주의다. 즉,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이 의식적으로 원하거나 말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논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동등하다는 환상’은 실제 자본주의적 교환 관계는 불평등, 부자유하기 때문에 환상인 것이다. 마르크스가 ‘정치적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고 한 것은 이같은 ‘환상’을 실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환상을 배태한 실제 사회적 관계 및 그것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해소하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서 원론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자본가의 의도나 지배자의 의도, 심지어는 노동자의 저항과도 무관하게 그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그 자체의 모순에서 파생되는 추상적(비현실적) 관계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은 불가피하게 ‘보편적 인간’(유적 인간)이라는 관념을 창출해내지만, 이 보편적 인간은 이 개념이 상정하고 있는 보편성을 결코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정치체제의 다양성(권위주의, 파시즘, 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관철되는 근본적 현상이다.

따라서 마치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가 ‘진자’(pendulum) 운동을 하며 실현되었다가 혹은 다시 후퇴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적이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비민주적이거나 하는 ‘변덕’에 의해서가, 또는 단순한 ‘내부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¹⁾

3.

마르크스는 ‘임금노동과 자본’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자본과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며, 임금 노동은 자본을 전제로 한다. 둘은 서로서로 제약하며, 서로를 산출해낸다... 그러므로 자본을 늘리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자 계급을 늘리는 것이다... 생산을 위해 쓰이는 자본인 생산 자본이 급속히 늘어날수록, 따라서 산업이 번창해질수록, 다시 말해 부르주아지가 부유해질수록,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자본가에게는 더욱더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며 노동자는 더욱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상태를 그럭저럭 살만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조건은 생산 자본이 될 수 있는대로 급속히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를 살만하게 해주는 것, 즉 생산 자본의 성장이란 ‘산 노동에 대한 축적된 노동의 힘(죽은 노동)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

1) 이와 관련 필자는 민주화를 ‘결정적인 순간(critical moment)에서의’ 이행(transition)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과정(long-term political process)’의 전환(transformation)으로 파악해야한다고 본다. 민주화는 속도에서 점진적일 수도 있고 급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방향에서 전진과 후퇴, 진보와 퇴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화는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 반민주화(anti-democratization), 재민주화(re-democratization)등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 정치적 궤적이다. 문제는 무엇이 민주주의를 이행, 전진, 퇴보하게 만드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의 지배가 성장하는 것이다“.

생산적 자본의 성장, 즉 자본주의의 확장은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이처럼 자본주의 확장기에는 자본에 '저항'할 유인이 적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자본가들도 관대하다. 또는 노동운동은 쇠퇴한다(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과거에 '지체된' 성장으로 인한 지연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 투쟁이거나, 혹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임금 가치의 하락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축소된다. 즉 반자본주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축소된다. 대표적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 반면에 민주주의는 확장/심화된다. 왜냐하면 이같은 사회적 관계의 확대와 그 실천에서 파생되는 '동등성'과 '보편성'의 관념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산적 자본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자체 모순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의 실천에서 발생하는 동등성과 보편성의 관념은 약화된다. 자본은 노동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따라서 과거의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이념의 유제가 현재 자본이 약화된 틈을 노리고 노자 관계 자체를 전복시킬 위험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른바 '비민주적' 경향이 강화된다. 단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수가 이같은 위험에 동조한다.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의 공동운명, 이해관계가 똑같지만, 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자인 한, 그의 운명은 자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4,

자본주의적 노자 관계(임노동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동등함이라는 의식과 이 의식에 기초하여 구성된 정치적 제도(민주주의) 사이에는 이중적인 모순 관계가 존재한다.

첫번째 모순은 이 의식 자체가 허구적 관계(추상적 관계)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임노동은 '평등한' 교환 관계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해방이 계급의 해방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 가상의 평등성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 평등성이라는 관념 때문에 늘 '무력을 독점한' 국가를 통해 자본 자체를 전복할 위험이 있다는 피해망상을 자본가 계급에게 불어넣는다. 이른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나, 'red scare'와 같은 사회적 망상들은 모두 이같은 가상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정신병이지만, 그러나 이 정신병은 현실적 근거에 출발한다. 이같은 망상 때문에 자본가계급은 민주주의 자체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단지 '공산주의'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협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는 익살맞게도 노동자들은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자본가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또는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절대적 통제 하에 놓기 위해, 즉 민주주의를 비민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한다. 그래서 마치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둘 다 자본주의에 기여한다.

II. 근대 자본주의 정치의 비밀 - 화해 불가능성의 화해가능성

5.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르다. 이는 역사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성립과정을 보면, 혹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기원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별개의 것, 심지어 적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전환, 즉 자유민주주의로 전화하는 정치과정이 있었다.

자유주의는 신분제적 권위주의와 선을 그으면서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국민국가의 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했던 자본가계급 나아가 자본주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다. 나아가 구체제의 몰락을 가져온 자본주의로의 '사회적 대전환'속에서 자유주의는 유일한 혹은 처음부터 헤게모니적 정치 이데올로기 및 세력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화주의, 민족주의, 무정부주의등 다양한 정치이데올로기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Bottomore 1979; Therbone 1977). 나아가 자유주의는 그것이 물질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우월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때 민주주의를 배척했던 자유주의가 어떻게 하여 민주주의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전취해갔는가? 이 모든 것은 에릭 홉스봄이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의 '이중 혁명'이라고 말한 장기 19세기 과정에 서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때의 혁명은 노동계급의 혁명이 아니라 자본의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혁명이다. 이 역사적인 시기는 자본주의의 등장, 국민국가의 건설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근대정치'를 주조한 시기이기도 하다. 근대적 거시 변동이 자본주의 출현과 발전, 국민국가의 건설, 그리고 정치체제로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3각 관계로 정립된 과정이다.

6.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려는 투쟁이었으며 민주주의는 신분제 정치질서에 대항하여 정치적 참여권의 확장을 위한 정치투쟁이었다. 결국 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분열 혹은 화해 불가능성을 의미한다.²⁾

고로 개념적으로 기원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고,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과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동거가 가능해졌는가? 이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화해불가능성이 절합하는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인민주권' 대신에 선거주권을, 다수 지배 대신 대의제를, 평등 대신 자유를 중심에 두는 자유민주주의로 전화하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렇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화해 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로 완성되었다.

강조했듯이 이 절합은 우연적이면서, 즉 논리적 필연성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역사적인 계기와 투쟁을 통해서 실체화되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려는 투쟁이자 이념이었고, 민주주의는 신분제 정치질서에 대항하여 정치적 참여권의 확장을 위한 정치투쟁을 위한 사상이었다. 시작부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 분열되었으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의 분리과정(헤겔적인 시민사회와 국가의 대당)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의 재통합 과정이 일어났다- 정확히 말하면 '공공영역' 혹은 정치체의 경제로부터의 자율화과정이 일어났다. 그럼시적 의미의 정치사회가 혹은 맑스적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과연 자본주의로부터 '독립'하거나 '분리된 정치적 공간'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지속되었지만, 민주주의는 그런 정치적 자율의 공간을 의제화하기에 적당한 이념이었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걸맞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결합이었다. 그리하여 사적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은 자본주의 국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사적 소유의 자유를 민주주의개념이 표방하는 1인1표의 정치적 시장에서의 권리와 자유에 등치시킴으로서 사적 소유의 자유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이리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과정, 즉 고전적 자유주의를 고수하되 자본주의 내 타협적 정치기제로서 민주주의의 변용과정이 일어났다. 결국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내포된 '평등'을 '자유'와의 조화라는 개념으로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전화하였다. 대표적으로 한때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비난하기도 한

2) 여기서 먼저 한가지 분명히 해두자. 여기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liberalism)'이다. 이는 기존의 한가지 한국에서의 특유한 용법으로부터 일단 자유주의의 역사성과 이념적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말이다. 즉 이 글에서 의미하는 자유주의는 한국의 보수 권위주의체제가 차용하여 헌법에서 명시하고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그 '자유민주주의'(즉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으로서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사적으로 구체제를 해체시키고 자유를 중심으로 사회질서를 새로이 재편하고 나아가 정치적 자유시장을 열고자 했던(혹은 구체제 엘리트와 권력의 분점을 요구했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문지영 2011; 박찬표 2008).

J.S. 밀은 입장으로 바꿔 다수의 계급(즉 노동자)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대의제와 차등대표제를 지지하였다. 그가 다수 지배, 즉 인민지배를 피하기 위해서 대의제를 지지했다는 점을 주목하다. 19세기 영국에서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닌, 심지어 반민주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정치적 결사체 (정당) 역시 “party”라는 경멸조의 호칭으로 불리며 반민주적이라고 배격되었다. 민주주의는 오로지, 사적 사유의 자유를 가진 ‘시민’ 개인들의 것이었다. 이 초기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그리스 시민의 민주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

민주주의가 대의제와 적대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대의제와 등치되면서 민주주의는 누가 인민이나, 혹은 인민지배는 어떻게 관철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수의 지배를 대리할가의 절차의 문제(modus procedenti)로 치환되었다(R Williams; J. Schumpeter, 1975) 이렇게 먼저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묘한 접합이 일어났고, 그 다음 자유주의를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불가능한 결합이 이뤄졌다. 자본주의 상부구조로서, 그리고 자본주의와만 유일 양립가능한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바로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capitalist democracy)다.

Ⅲ.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 자유(민주)주의

7.

한국의 노동배제의 민주화, 노동정치없는 민주주의 정치, 나아가 좌파정당없는 정당정치는 한국의 자유주의정치가 민주화이행후 정치시장에서 지속했던 배척, 배제 나아가 공모적 억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집권 시기 동안에 진보좌파와 노동계급의 정치적 통합보다는 보수 우익과의 정치적 동거, 나아가 권력 분점체제를 택했다. 이는 민주화이행 직후부터 자유주의 정치의 두 분파중 김영삼 세력의 민자당과의 합당,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김대중과 대자본가 정몽준의 연합정치 시도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정치적 자유주의 세력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었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이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자유주의와 친연적이다. 이들은 발전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시장의 자유’로 경제적 민주화를 이해하였고, 탈규제등 ‘경제 자유화’를 경제민주화로 이해했다. 서유럽에서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와 화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로 귀결되었던 것과 동일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적 질서를 완성한 것은 바로 다름아닌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이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를 하나의 '민주화'로 이해하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었다.

그 점에서 한국의 자유주의세력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도입 주체가 된 것은 불가피했거나 외부적 조건의 압력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저항하지 않는, 나아가 이념적으로 심지어 친연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인 노동배제의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은 한국적 자유주의(Korean liberalism)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 민주화이행이후 '장기적 민주화의 정치적 과정의 성격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계급없는 민주화의 경로를 밟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자유화)의 '이중전환'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양자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우익 보수주의라기보다는 한국의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87년 민주화 이행은 97년 경제적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분리된 '체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행과 경제적 이행은, 정치적 민주화이후 경제적 자유주의적 질서화로 완결되었다. 필자는 에릭 홉스봄이 산업혁명과 정치적 시민혁명을 자본에 의한 '이중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춰, 이 정치과정을 민주화 정치이행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의 '이중전환'이라고 규정하였다 (Kweon, Young-Sook, 2008).

8.

한국의 민주화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제도시장으로의 안정적 복귀를 의미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전쟁 이전 식민지 해방이후 보수 양당체제를 특징으로 했던 '48년체제'를 복원한 것이다.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은 결국 아담 스미스주의의 말대로 자본주의/지배엘리트의 경제적 이권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정치적 게임의 장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치권력 장악 가능성을 확보한다(A. Przeworski, 1988).

하지만 스미스주의의 게임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스미스주의, 나아가 루쉬마이어등(1996)은 민주화의 지속 혹은 공고화의 조건으로 자본주의의 또하나의 주요세력인 노동계급의 참을성 혹은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든다. 노동계급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당장 링(polity) 밖으로 뛰쳐나가 계급투쟁의 전면전에 나서지 않도록 노동에 대한 정치경제적 통합을 하고/나아가 노동계급을 순치하기 위해 그들을 장내에서, 즉 제도정치권에서 대리 대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 역할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세력의 과제였다. 자유주의는 노동계급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했으며(단지 "부르주아없이 민주주의 없다-배링턴 무어-가 아니라 "노동없이 민주주의 없다"- 루쉬마이어 등-이라는 것), 그래서 노동과의 정치적 계급연합을 통해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였고, 이는 결국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regime)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루베르는 이를 '자유-노동 동맹(lib-lab coalition)'의 길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적 민주화의 유형이라고 규정하였다(Luebbert, 1991).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자유주의 세력은 노동계급을 대표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노동과의 정치적 동맹을 맺지도 않았다. 오히려 노동이 일부 나아가 점차 절대다수가 자유-노동동맹을 꾀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노동과의 동맹대신, 한국의 지연된 민주화속에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중간계급과 나아가 이들의 더욱 강한 '민주주의'의 개혁지향에 기초한, '자유-시민'동맹(lib-civic coalition)에 의해서 두 차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나아가 이런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적 헤게모니에 기초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는 '리버럴 민주주의'로 전화하였다.

필자는 이 특정한 유형의 민주화의 장기적 정치과정을 두고 '노동계급없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Democratization without the Working Class)로 개념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유-노동 동맹'이 부재한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경로는 비교사적으로 한국 '사례'가 갖는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동일성과 차이점).

9.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자유 앞에서 민주주의는 왜 무력했던가?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선언했다. 맞는가? 또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재벌 이재용의 법적 처벌과 관련하여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발언이다. 민주주의 법질서와 경제적 자본주의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분리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의 믿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가? 만약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화해불가능성을 화해가능한 정치체제로 만들 때의 전제, 즉 평등과 자유의 조화는 어디에 있으며, 정치는 왜 경제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가? 노무현과 문재인의 발언이야말로 정치가 경제 앞에서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의 자본주의적 자유 앞에서 무력하다는 증좌가 된다.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 당선된 대통령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은 '계엄/쿠데타'에서 비롯된 '헌정 수호', '민주주의 수호'를 기치로 등장했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은 글로벌 대자본으로 성장한 일부 IT 산업 및 금융자본과의 결탁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성장, 그리고 이 성장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치'의 목표로 간주되며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민주주의'라는 구호(정치 지형의 관점에서는 '민주대연합')는 거리낌없이 폐기될 수 있다. 즉 이런 점에서 노무현, 문재인 정권과 다르지 않다. 다만 글로벌 경제 국면이 다를 뿐이며, 손을 잡는 자본의 성격이 다를 뿐이다.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이제까지 한국에 등장했던 보수 및 자유주의 정권들 가운데 가장 순수하게 노골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이며, 기대고 있는 '자본'은 '금융자본'이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선언하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원으로 '인공지능' 투자를 해야 하는 IT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처럼 대중의 저항이 최소화되는 민주적 체제의 자발적 자본주의 확장 기여야말로 가장 유리한 체제이다.

결국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사고는 시민사회와 국가를 분리한다. 국가를 중립자, 혹은 불가피한 리바이어던으로 인정하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로부터 분리를 통해서 정치가 가능한 장소로 호명된다. 이렇게 하여 리바이어던(국가)은 집단적 의지의 집행자가 되고, 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을 반납하는 대신, 누가 인민을 대표 혹은 대리할 것인가와 누구를 인민의 대리자로 뽑을 것인가라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로 화해가능한 정치체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과연 현실은? 과연 민주주의는 경제로부터 자본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가?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비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는 계속 정치 그 자체를 실종시킨다. 정치적 언어를 법어의 언어로 대체한다. 사회적인 것들의 목소리를 법적이고 제도적인 틀로 가둔다. 결국 정치의 부재와 실종은 법이 위치한 국가, 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화해가능한 정치체제가 맞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이다.

IV. 최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변화: 국가와 신자유주의

10.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는 아직 세계화라는 거시적 경향은 종료되거나 그 수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에서도 관찰된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핵심 논리들(시장 자유주의, 탈규제, 자유방임)은 약화되었지만, '시장'에 대한 논리들, 즉 시장이 여전히 성장과 위기 탈출의 가장 결정적 공간이라는 관점은 약화되지 않고 있다. 대신 '탈규제, 민영화'의 자리를 대체하여 들어온 것이 국가 주도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의 중요성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자본주의인 '중국식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유럽은 이미 2024년에 전 이탈리아 총리이자 ECB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가 유럽 성장 리포트에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나아가 이에 부수되는 노동시장 정책 및 복지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한창이었던 세기말과 달리 지금 21세기에는 신자유주의에 대당

으로 간주했던 국민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자본주의 국가' 자체의 성격 변화를 지적하고 개념화하는 시도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즉 자본주의 국가와 국가 자본주의의 차이, 자본주의 국가중 자유주의적 국가와 국가자본주의의 비교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50-60년대 발전이론이 부활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덩달아 종속이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의 이론이 대두되었던 당대와는 달리 지금은 일국적(발전모델은 자립경제 모델을 전제로 함)인 산업정책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는 세계화 경향에 동조하는 대외 지향적 혹은 대외적 압력에 저항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특징이다.

결국 이런 선회는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일정한 수정이며,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회귀 혹은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요약하자면 현재의 추세는 일종의 '혼합적'(mixed)인 산업정책(발전 모델)이며 이것이 혼합적인 이유는 국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와 민간 자본(특히 사적 자본-사모펀드) 사이의 공조(governance)를 강조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과 일본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와도 다른 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계속에서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공조, 민간사기업들에 의한 공공영역의 포위가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취임하자마자 국가에 의한 인텔 주식 10% 매입등 국유화의 증가는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과거 절대적인 가치로 칭송받던 시장이 현실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의 변화가 아니다. 국가자본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는 생산 관계를 위에서부터 조직하는 방식이며, 자유 경쟁에 맞서 기득권층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헤르만 헬러가 1933년 《노이에 룬트샤우》에 발표한 논문 "권위주의적 자유주의(Autoritärer Liberalismus)"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독일을 위해 제시한 "권위주의적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환기해볼 수 있다. 이 개념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적 자유주의, 독일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1930년대 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주의는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권위주의를 통해 경제 정책을 중앙집권화하는 강력한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정치 체제를 넘나드는 독일 자본주의의 궤적은 여전히 국가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유형론 문헌에서 "조정된 시장 경제"라고 묘사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다(Negar Mansouri,

3)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예외적인 사례로 머물지 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2026년 06월 15일 참조. <https://dem-labor.org/praxis/chart/6146>

2026).

이와 관련, 헌터는 자본주의 국가를 유형적인 사회적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내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의 국가" 또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전체의 특정한 순간"이라고 주장한다(Hunter 2023, 254; 2021, 192).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는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분리라는 제도화된 환상에서 진화한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형태"이다. 이 주장의 요점은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이 이론화를 저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구는 특정한 자본주의 사회(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회)의 정치적 발현으로서의 국가의 이중적 움직임과, "경제적 필연성이나 필요성으로부터 자율적인"(주관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이중적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Hunter 2023, 268).

"미국에서의 국가 자본주의의 부상"이나 "자유 시장의 종말"과 같은 자극적인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의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재부상에 주목하지만, 최근의 '신국가주의'는 과거 뉴딜 정책이나 케인즈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이전의 국가 개입 방식과는 다르다. 신국가주의는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의 틀 안에서 구체화되는데, 이 틀 안에서 국가의 역량과 자원은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역량 없이 사회 재생산 조건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원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주의는 더욱 강화되었고, 현재는 선진 자본주의 핵심 국가(미국의 트럼프 경제 정책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알라미와 딕슨은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인 자유방임주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초래했으며, 따라서 정치적 목표에 부합하는 영토적 축적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유 경쟁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경제에서 한 지역의 국가 자본주의 부상은 다른 지역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결국 국가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강요한다. 그들은 이를 "국가 자본주의의 내재성"이라고 부른다(알라미와 딕슨, 2024, 17). 그들이 "국가 자본주의 3.0"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국가주의적 전환의 물결은 "시장 지배를 탈정치화하는 데 근본적으로 관련된 형태변환적인 계급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 분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도로 시장화되고 기업화되고 금융화된 형태의 국가 개입이다(ibid. at 31, 327).

11.

고로 영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본 신조, 즉 의제화된 '정치와 경제의 독립성'(또는 "분리"된 통일성)에 기반한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 자체를 포함한 공적 도전에 맞서 사유재산 관계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민주

주의의 정치체제와 지배질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무리 '축적의 위기'를 겪고, '국면적 위기'를 겪어도, 글로벌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여러 '체제 전환' 시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국가 및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위기 그 자체는 자본주의를 폐기시키지 못한다.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봉건제의 위기처럼, 새로운 계급적 전투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힘의 지형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 권영숙, 2014, 「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의 노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비판 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17. 「 민주화 이행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집 여름호.
- _____, 2018.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경제와사회』, 2018년 봄호(통권 제117호)
- _____, 2019. "국가의 비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권리담론 (right talk)의 팽창과 법의 언어- 법의 부재(不在)와 편재(遍在)에 대한 일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9 봄 정기학술대회 기조발제
- _____, 2025.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2주년 기조발제 (2025. 6.14)
- _____, 2025.4.9. "2025년 국내정세 전망-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그리고 위기의 징후와 폭발들: 계엄탄핵국면의 의미와 탄핵후 한국 정치경제, 지배계급의 선택", <전망과실천>19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 2025.5.07. "헌정위기(constitutional crisis)는 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전망과실천> 8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_____, 2026.3.30. "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전망과실천> 28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 2026.2.11. "2026년 국제정세전망(2) 막장의 세계, 그리고 위대한 세력 균형", <전망과실천> 27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김수진, 1999. "한국정치 균열구조의 전개와 담합정당 체제", 《역사비평》 49.
- 문지영, 2005.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자유주의- 민주화의 기원과 전망에 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 박상훈, 2006. "한국의 '87년체제' 민주화이후 한국정당체제의 구조적 변화", 《아세아연구》, 49-2
- 박찬표, 2008.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상: "민주주의 과잉"인가 "자유주의 결핍"인가, 《아세아연구》, 통권 134호.

서관모, 2017. “‘사회체제’론은 좀더 발전되어야한다”, 《마르크스주의》 14권 3호.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박세연 역, 어크로스 (원제: How Democracies Die).
 슬라보예 지젝, 알랭 바디우, 다니엘 벤사이드, 장-뤽 낭시, 자크 랑시에르, 조르조 아감벤, 웬디 브라운, 2010.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김상운 양창열 홍철기 역, 난장
 임현진 김병국, 1991.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 계간 《사상》(겨울호)
 자크 랑시에르, 2011(2005).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허경 옮김. 인간사랑. 최장집. 2006. "노동없는 민주주의로의 전환- 일본 사회당의 실패에 관한 한 해석", 《아세아연구》, Vol. 49, No.2
 콜린 크라우치, 2008.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이한 옮김. 미지북스.

Kweon, Young-Sook(2008), *Liberal Democracy without a Working Class?: Democratization, Coalition Politics, and the Labor Movement in South Korea, 1987-2006* . Columbia Univ. Diss.

Alami, Ilias, and Adam D. Dixon. 2024. *The Spectre of State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T Evans, AJ Ayers, 2006. "In the service of power: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Citizenship Studies* Vol. 10, No. 3,
 Gourevitch, Peter A. 1993. "Democracy and Economic Policy: Elective Affinities and Circumstantial Conjunctures," *World Development* 21-8.

Huber, Evelyne, Dietrich Rueschmeyer and John D. Stephens. 1997. "The Paradoxes of Contemporary Democracy: Formal, Participatory, and Social Dimensions." *Comparative Politics*, 29(3).

Hunter, Rob, Rafael Khachaturian, and Eva Nanopoulos, eds. 2023. *Marxism and the Capitalist State: Towards a New Debate*. Palgrave Macmillan.

Huq, Aziz and Tom Ginsburg, 2018. How to Lose a Constitutional Democracy, <https://www.democratic-erosion.com/wp-content/uploads/2018/03/Huq-and-Ginsburg-2018.pdf>

Luebbert, Gregory M. 1987. "Social Foundations of Political Order in Interwar Europe." *World Politics*, 39-4. pp.449~478.

Mann, Michael. 1995. "Sources of Variation in Working-Class Movements in Twentieth Century Europe", *New Left Review* Vol.212.

Mansouri, Negar., 2026. "Capitalist State, State Capitalism, and the Current Conjuncture of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Economy*, 6(1)

O'Donnell, Guillermo, 1992,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 eds.,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17-56,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rzeworski, Adam, 2024. "Who decides what is democratic?", *Journal of Democracy*, July 2024, Vol 35-3

Rana, Aziz, 2025, "Constitutional Collapse", *New Left Review*, March 2025

<https://newleftreview.org/sidecar/posts/constitutional-collapse>

Przeworski, Adam. 1986. "Som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Slater, Dan, 2025, "The Authoritarian Origins of the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Volume36, Number2, April. pp. 118-129
<https://muse.jhu.edu/pub/1/article/954568>

Streeck, Wolfgang. 2011. "The Crises of Democratic Capitalism." *New Left Review*, 12.

Therborn, Goran. 1977. "The Rule of Capital and the Rise of Democracy", *New Left Review* No. 103:3-41.

Tilly, Charles, 1995, "Globalization Threatens Labor's Rights",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47, pp.1-23.

Thornhill, Chris, 2022. "Constitutionalism and Warfare". *Direito Publico*, vol.102, 343-366.